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한국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 1. 사회통합의 의미

국가보다 나은 삶을 희망하는 국민을 위해 수행해야 할 기본 역할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물질·상징적 요건을 개선하는 일이며, 둘째는 “민인의 민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흡수적 혼란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일이다.

“가치화(valorization)” 명제로 대변할 수 있는 첫 번째 역할은 물질 가치(material values) 및 상징적 가치(symbolic values)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경제활동 및 문화활동과 연관된 것이요, “공조(coordination)”의 명제로 통괄할 수 있는 두 번째 역할은 주로 통치(governance)와 유대(solidarity)라는 정치사회적 과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관한 국가의 임무는 유대의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거기에는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국가의 기능적 통합(체계통합, system integration)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휘잡지 못하면 국가가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 점은 정밀한 과학적 증거를 거듭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시절부터 누적된 불신 때문에 “미친 소”에 관한 촛불의 분노에 속수무책이었던 현 정부의 무력한 모습에서 여실히 판독할 수 있다.

## 2. 사회갈등의 성격 변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적대적 사회갈등의 소재는 시기별로 유형을 달리해 왔고, 그에 따라 사회적 불만의 성격도 변모해 왔다.

1948년 건국 이후 60년대까지는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불만의 진앙이었고, 고도성장으로 절대적 빈곤이 완화되기 시작한 70~80년대

에는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정치적 억압”이 사회 불만의 주된 원천이었다. 그러나 저속성장기에 들어선 1990년대 이후, 특히 성장기조 자체가 와해되기 시작한 IMF 환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회 불안”이 적대적 갈등을 야기하는 최대의 사회 불만 요소로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 생활여건의 조성이야말로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선결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 3. 양극화: 사회 불안의 분화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양극화 문제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 국면을 맞아 우리 사회에 재현되고 있다. 양극화의 원천은 생계 문제와 직결된 소득 격차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여파는 경제격차가 근로소득이나 불로소득이냐에 따라 다르며, 정상적 근로행위에 의한 빈곤 탈피의 가능성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적 양극화가 주거지 분화 및 자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져 심각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공간적 격차는 소비생활의 분화를 통해 문화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문화생활의 양극화는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투명한 계급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계층구조를 상층-하층이라는 연속적 형태에서 상류-하류라는 단절적 형태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소득격차에 기인한 경제적 양극화가 주거 및 자녀교육의 차등

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양극화와 소비양식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양극화로 외연되고 있는데, 양극화의 현상이 의식적 차원에까지 파급됨으로써 한국사회는 물과 기름처럼 화합하기 어려운 이질적 존재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폐쇄사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고도 성장기에 한국사회의 의식적 계층구조는 성취의 꿈에 부푼 다수의 ‘열망계급’과 거듭된 실패로 의기소침한 소수 ‘실망계급’이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공생하는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IMF 환란 이후 성장지체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독점하는 상류계급에 귀속되려는 소수의 ‘야망계급’과 언제 일자리에 떨어날지 몰라 상시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다수의 ‘낙망계급’으로 의식적 위계적 질서가 재편되는 경향이 역력하다.

## 4. 양극화 극복 방안

한국사회의 양극화 논의는 주로 “중산층 몰락”이나 “빈곤층 확대”라는 경제적 시각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침체로 생존적 불안감이 전면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사회적·문화적·의식적 단면까지를 망라한 양극화 논의의 확장이 절실히 요청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중산층 침하 현상뿐 아니라, 상하 계층 간의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을 분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직업 지위는 소득과 자기 존재

감의 핵심적 요건이 된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일자리의 창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안정적 직업지위의 확보야말로 취업을 목전에 둔 청년 세대, 실직 불안에 시달리는 장년 세대 및 노후 대비에 부심해야 할 중년 세대는 물론이요, 그들에 의존해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공통적 여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취업은 인간다운 삶의 필요조건이되 충분조건은 아니다.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이라는 제도적 개선책을 넘

어서서, “마음의 가난”을 초극할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윤리가 사회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배려, 나눔, 일치를 향한 국민적 잠재력은 새만금 기름유출사태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WBC 야구대표팀에 대한 거국적 성원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간단없이 표출되어 왔다. 이처럼 충만한 상생적 열정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결집시키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사회통합적 역량이고 책무가 아닐 수 없다. **국회**